

법무부

| 2018년 성과 |
| 2019년 계획 |

목 차

I.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1
1. 법무부 탈검찰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
2. 공수처 설치 국회입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3
3.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입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4. 과거사 진상 규명 대상사건을 선정, 조사 중에 있습니다.	5
5. 과거사 직권 재심청구 권위주의 시대 사건의 진상규명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
6. 검찰 시스템 개혁 검사인사 혁신·의사결정 투명화·직접수사 축소 등 시행하였습니다.	7
II.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8
1. 적폐사건 및 중대 부패범죄 엄정 대처하였습니다.	9
2. 불법영상물·음주운전·가정폭력 엄중처벌 및 법개정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10
3. 경제정의 입법 상법개정 및 집단소송제 확대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4. 민생보호 입법 상가임차인 보호입법 국회통과! 민생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
5. 국가송무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5
6. 법조인 양성제도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

목 차

Ⅲ.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17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기업과 인권’ 신설 등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18
2.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3. 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1
4. 인권친화적 출입국·외국인 정책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
5. 수용자 인권보장	
과밀수용 해소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
Ⅳ. 2019년 역점 정책	27
1. 개혁·민생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8
2. 민생범죄 및 생활적폐	
집중 수사, 엄정 처벌하겠습니다.	31
3. 여성 보호 정책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
4. 난민·외국인 정책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36
5. 국민참여형 열린 법무행정	
확대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37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1

법무부 탈검찰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개요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인재 등용으로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법무정책 추진

■ 경과 및 성과

- 검사로 임명하던 4개 실·국·본부장, 1개 국장급, 8개 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외부 전문가로 임명
 - 법무실장('17. 8. 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7. 9. 4.) 및 인권국장('17. 9. 29.), 범죄예방정책국장('18. 4. 2.)을 외부인사로 임용
 - ※ '17. 5. 당시 7명 중 6명에 달하던 실·국·본부장 보임 검사 수를 2명으로 축소
 - 국장급인 법무심의관('18. 10. 1.), 범죄예방기획과장 등 8개 과장 직위, 14개 평검사 직위를 비(非)검사로 임용

법무실장 임명('17. 8. 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임명('17. 9. 4.)



인권국장 임명('17. 9. 29.)



범죄예방정책국장 임명('18. 4. 2.)



■ 계획

- 주요 과장 및 평검사 직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 지속 추진
- 탈검찰화로 임용된 보임자들을 법무행정에 정통한 인재로 양성

2

공수처 설치, 국회 입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 개요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신설하여 권력형 비리 근절

■ 경과 및 성과

- '17. 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설치 권고
- '17. 10. 15. 공수처 법무부안 발표
 - 국회 계류 중인 법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종합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근절이라는 기본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 공수처 법무부안 주요내용 |

- ▶ 소속 / 권한 : 독립기구 / 수사·기소권
- ▶ 규모 : 처장·차장 각 1인 포함 공수처 검사 25인, 수사관 30인, 기타 직원 20인
- ▶ 수사대상자 : 대통령, 국회의원 등 포함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전직 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
- ▶ 수사대상 범죄 :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 및 그 관련범죄 (공범, 범인은닉, 위증, 관련인지사건 등)

- '18. 11. 송기현 의원, 법무부안 기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계획

-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국정과제로서 의원입법안 발의가 완료된 상태인바, 공수처 신설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

수사권 조정, 국회 입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요

- 검·경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소추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관여 금지 등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관계 재정립, 인권 친화적 경찰 수사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추진

■ 경과 및 성과

- '18. 2. 8.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
- '18. 6. 21. 법무부·행안부 장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18. 7. ~ 1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조문화하여 법무부안 마련
- '18. 11. 9. 사개특위에 법무부안 제출
- '18. 11. 12. 백혜련 의원, 법무·행안부장관 합의문 기초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발의

|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백혜련 의원안) 주요내용 |

- ▶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
- ▶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영장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경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 ▶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당사자 이의제기 시 송치 및 사건기록등본 송부 등 보완 장치 마련
- ▶ 검사의 직접수사는 경찰공무원범죄,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으로 제한
- ▶ 경찰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 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

■ 계획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핵심적 국정과제로서, 의원입법안 발의가 완료된 상태인바, 법안 심사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

4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을 선정, 조사 중입니다.

■ 개요

-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경과 및 성과

- '17. 12.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
- '18. 2.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발족
- '18. 5.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강제추행 부분 재수사 권고
- '18. 10.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및 심의결과 발표
- '18. 11.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위증 조사권고,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촉구 권고,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 발표
- '19. 1. 'PD수첩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 발표
- 현재 KBS정연주 배임 사건 등 개별사건 7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조사 중

■ 계획

-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 등 조사 및 심의 결과가 발표되면 후속조치 방안 등 마련 예정

5

검찰 직권 재심청구,

권위주의 시대 사건의 진실 규명 및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검찰총장 권한인 직권 재심청구를 통해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

■ 경과 및 성과

-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 총 364명에 대해 재심청구하여, 그중 208명 무죄선고, 나머지 재판 중구
 - 대법원에서 위헌·무효 확정('18. 12.)된 1972. 10.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계엄법위반 사건(144건 185명)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지속적 직권 재심청구로 과거사 사과의 진정성 담보

[직권 재심청구 현황]

구분	청구 완료	무죄 선고	재판 중	심리 중
진실화해위 재심권고 사건	30명	23명	0명	7명
긴급조치위반 사건	218명	166명	23명	29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명	18명	22명	71명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5명	1명	1명	3명
합계	364명	208명	46명	110명

- 당사자 청구 재심사건의 대응기조 전환
 - 당사자 청구 재심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유지에 치중한 대응에서 벗어나 △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 개진 및 신속심리 요청 △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한 무죄구형 △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 등 능동적으로 대응
- ※ '17. 8. 과거사 사건 대응기조 전환 이후 재심개시결정된 총 76명 중 즉시항고 3명, 무죄선고 총 67명 중 상소 1명

■ 계획

- 지속적으로 과거사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 재심청구 예정
- 형사정책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공안사건 재심백서 발간 추진

6

검찰 시스템 개혁,

인사혁신, 의사결정 투명화, 직접수사 축소 등 시행하였습니다.

■ 개요

-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검사인사제도,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 등 국민을 위한 검찰 자체 개혁을 추진

■ 경과 및 성과

- (사상 최초 인사기준 법제화, 정치적 중립 및 형평성 강화)
 - '18. 12. 18. 「검사인사규정」 등 제정·공포
 - 경향교류 원칙 강화 등 기회균등 제고, 인사시기 예고제 등 검사 인사 기준 법제화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17. 12.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18. 1.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상급자와 주임검사간, 대검과 일선청간 이견 발생 시 그 각각의 의견이나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 서면 이의제기, 이의제기에 대한 기관장의 결정 및 이의제기 관련 서류의 보존,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불이익금지 등 규정
- (검사 직접수사 최소화)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부패범죄수사 전담부서 축소
 - '18. 2.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 폐지, 차치지정 이하 특수전담 폐지 등 부패범죄 전담부서 축소
 - 전담부서 이외 부서는 원칙적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총장 승인 하에서만 수사 가능

■ 계획

-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추가적 개혁 추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1

적폐사건 및 중대 부패범죄, 엄정 대처하였습니다.

■ 개요

- (적폐사건 철저 수사) 국정농단 등 적폐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고, 비리재발 방지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채용비리, 방위사업비리, 불공정거래(금융·증권 및 공정거래 분야)에 엄정 대처하여 국민의 불신 해소

■ 경과 및 성과

- (적폐사건 철저 수사) 국정농단사건, 국정원 특활비 불법상납사건,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화이트리스트)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공소유지 중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채용비리, 방위사업비리,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
 - (채용비리) '17.7.~'18.3.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건 등 33명 단속(16명 구속), '17.11.~'18.6.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사건 40명 기소(12명 구속), '18.6.~'18.12.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신한은행 채용비리 8명 기소(2명 구속), 대법원 사법정보화 입찰비리 사건 5명 구속
 - (방위사업비리) '17.5.~'18.12. KAI 회계부정 사건 18명 기소(3명 구속), 평택 미군기지공사 뇌물 사건 7명 기소(2명 구속) 등 61명 단속(18명 구속)
 - (불공정거래) '17.5.~'18.12. 엠피그룹 회장의 불공정거래 사건 5명 기소(1명 구속) 등 불공정거래 수사를 통해 648명 단속(130명 구속)
-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비) '18.6. 5대 중대 부패범죄, 재벌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관련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 횡령·배임의 필요적 구속사유 마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속기준 추가 등

■ 계획

- 지속적인 엄정 수사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민간 영역 부패 범죄로 역량 집중

2

불법영상물 · 음주운전 · 가정폭력, 엄정처벌 및 법개정 등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성폭력·가정폭력 등 성차별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 범죄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 경과 및 성과

- '18.10. 1. 법무부 장관, 검찰에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 엄정 대처' 지시
- '18.10. 19. 법무부 장관, 검찰에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지시
- '18.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 → 자신 신체 촬영물 및 복제물도 유포범죄 대상에 추가, 영리목적 유포행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 등
- '18.10.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 → 업무상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 추행죄 법정형 상향
- '18.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 ①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 추가, ②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 ③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제한' 추가 등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음주운전 사고 엄벌 및 불합리한 주취감경 제한
 - (특정범죄가중법)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향, (형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

■ 계획

-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 예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적극 지원

3

경제정의 입법 추진,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확대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요

-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가습기 살균제·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부도 위험 노출, 신용위험 전가, 자금경색 등 피해를 초래하는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 경과 및 성과

-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 법무부장관 경총 방문 경총회장단과 간담회,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 간담회, 경제단체·시민단체 간담회 등 개최
 - 상법 개정 '법무부안' 마련 및 국회 논의 적극 지원

| 상법 개정 법무부안 주요내용 |

- ▶ (전자투표제 의무화)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의무화함 → 소수주주의 투표율 제고
- ▶ (집중투표제 의무화)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 의무화 → 소수주주들을 대변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 제고
- ▶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나,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 →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감사 1명 선임 가능
- ▶ (다중대표소송 도입) 출자기준 50% 초과 자회사에 대하여 도입 → 대주주 등의 자회사를 이용한 비위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 사고 피해자와의 현장정책간담회, 공개토론회(선진법제포럼), 공정경제 전략회의 대국민보고(법무부장관 발표) 및 법무부장관 언론인터뷰를 통한 정책홍보
 - '18.9. 법무부안 마련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법사위 집단소송법안 관련 논의 적극 지원

| 집단소송법 개정 법무부안 주요내용 |

- ▶ 현행 증권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담합·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분야에 확대 도입하고, 집단소송제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개선
 - * (집단소송제)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

- '17. 10. ~ '18. 6.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 구축 위한 T/F' 구성하여 추진방안 협의
- '18. 5. 30.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을 위한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기존 최장 1년에서 '18. 5. 30.부터 6개월로 단축,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하여 '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 예정
- '18. 12.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 정기검사

■ 계획

- 지난 1년 동안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안 마련
- 정책수요자, 유관 부처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행동으로 국회 입법 적극 추진

민생 보호 입법 추진,

상가임차인 보호 입법 국회 통과! 민생 보호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개요

- (상가 및 주거지 임차인 보호) 상가 및 주택 임차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 경제적 취약계층 등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제한법」·「대부업법」간 최고금리 일원화
- (미성년자녀 등 법률복지 강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등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 경과 및 성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18. 10. 16. 시행)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10년간 안정적 영업 보장
- ▶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 추가
- ▶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확대
-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8. 1. 26. 시행) →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90%으로 보호 대상 확대
 -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을 높이고,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인하(9%→5%)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분쟁조정 활성화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18. 9. 18. 시행)
 - '18. 5.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방안' 회의 개최

- '18. 5. 3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시행 1주년을 맞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 ※ '17. 5. ~'18. 6. 기준 조정절차개시사건 대비 조정성립률 69.29% 도달, 저렴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음

○ 집합건물법 개정 추진

- 관리비 부담 완화 등 서민·청년·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에 대한 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제도 도입 추진
- 서울시 및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9. 1.) 중
 - ※ '18. 1.~10. 서울시장과 「현장 정책 간담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실무계(주택관리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관리인 등), 학계, 입주민(구분소유자, 임차인), 시민사회단체(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과 7차례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
 - ※ '18. 9. 21.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19. 1. 재입법예고

○ 법정최고금리 24%로 인하 시행 중

- '17. 11. 7.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일반 사인간 금전거래(기존 연 25%)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기존 연 27.9%) 법정최고금리를 모두 연 24%로 인하하여 '18. 2. 8.부터 시행
- ※ 불법사금융 확대 등 부작용 방지 위해 '18. 2.부터 3개월간 범부처 일제 단속 실시

○ 미성년자녀 등 법률복지 강화

-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가사소송능력 및 비송능력 확대,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마련 등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 '18. 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 ※ 가사사건의 분류체계 및 가사소송·비송사건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가사소송법 전체 조문(88개) 중 74개 조문 개정, 62개 조문 신설

■ 계획

- 향후 정책수요자, 유관 부처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행동으로 국회 입법을 적극 추진

5

국가송무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개요

-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 상소를 지양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국가 재정 낭비 방지

■ 경과 및 성과

-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설치·운영(’1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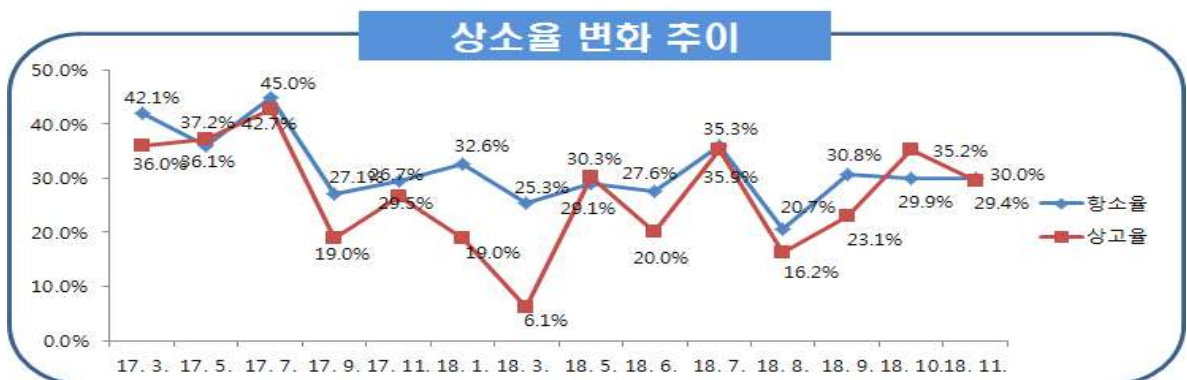
※ 18회, 32건에 대한 상소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대부분 반영

-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재심무죄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의 신속·적정한 피해전보를 위해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라 ▲ 무리한 상소 지양, ▲ 화해·조정, ▲ 청구인낙 등을 활용하여 소송 조기종결(’18. 1.~)

※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46건 조기 종결

- 상소권의 적절한 행사로 상소율 감소, 특히 과거사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상소를 자제하여 인권보장에 기여

※ 제도 시행 전 40%를 웃돌던 상소율이 20~30% 수준으로 저하·유지 중



■ 계획

- 국가송무제도의 지속적 개선 및 점검 추진

배경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해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안 모색
-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경과 및 성과

- '18. 3. 유관기관 자문기구로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
 - ※ 법무부 법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3), 교육 공무원(1), 판사(1), 검사(1), 변호사(3) 위원으로 구성
- '18. 3. ~ 10. 총 7회 회의 개최,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
- '18. 11.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발표

|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 시험장 지방 확대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시험 실시
- ▶ 판례 출제범위 제한 :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
- ▶ 출산 등 응시기간 연장 :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 시 1회에 한해 응시기간 연장
- ▶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 헌법, 민법, 형법으로 범위 축소

계획

-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반영('19. 1.)
 - 전국 5대 권역(총 8개 시험장) 시험 실시, 판례 출제범위 제한
- 법령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추진(연중)
 -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
- 중·장기적 검토 필요사항에 대한 심층적 연구활동 지속(연중)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 노트북 활용 답안 작성 방식 도입 등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기업과 인권’ 신설 등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 개요

- 보편적 인권 신장에 관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권, 기업과 인권, 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고려한 신규과제를 통해 인권 수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책담당자와 시민사회단체·이해관계자간 협의와 소통 강화

■ 경과 및 성과

- '17. 10. 30.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 '18. 1. ~ 3.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 실시
 - 주제 및 분야별 총 18차 협의
- '18. 8.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 공표
 - 국무회의 보고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표

|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주요내용 |

- ▶ 8개 분야, 254개 세부과제로 구성
 -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차별금지)
 -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참정권 등)
 -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노동권, 건강권, 보건환경권 등)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국제인권규범 이행, 인권교육 등)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기업과 인권)

■ 계획

- 인권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인권 정책의 청사진 마련
- 매년 말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제3차 기본계획 만료 시 전체평가

2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지위와 역할 강화) 대검 '인권부' 신설 및 일선 검찰청 '인권감독관' 확대 배치 등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강화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개정 권고
- (변호인 수사과정 참여 확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및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하여 변호인 조력권 강화 추진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국선변호제도 확대·개편 필요
-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심야조사 관련) 인권수사준칙 및 공보준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그에 위반되는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심야조사는 금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

■ 경과 및 성과

-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강화
 - 대검찰청 인권부 신설('18. 7.) : 대검 인권부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고, '인권수사자문관' 5명 배치하여 검찰수사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또는 '레드팀(red team)' 역할 수행
 - 인권감독관 12개 지점으로 확대 배치('18. 7.) : '18. 7. 인권감독관을 기존 전국 5개 지검에서 재경청(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수도권청(의정부, 인천, 수원지검)에 추가 배치, 총 12개 지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인권보호 기능 대폭 강화
-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18. 5. 10.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피의자 출석 요구시 유의사항 추가
- ▶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청취시에도 변호인 참여권 보장
- ▶ 조서 미작성시에도 피의자에 대한 출석 관련 사항 기록 편철
- ▶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2시간마다 10분 이상)
- ▶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 보장
- ▶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내용 사전 고지
- ▶ 피의자 조사시 가족 등에 대한 형사처벌 암시 발언 금지
- ▶ 체포·구속,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보호

○ 변호인 수사과정 참여 확대

- '17. 10.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권고
- '17. 12. 대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개정·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신문 중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언 가능
- ▶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자리에 동석하여 신문에 참여
- ▶ 변호인에게 신문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도록 허용
- ▶ 구금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장소 사전통지
- ▶ 변호인 참여신청서 양식 상 검사의 허가·불허 날인 삭제, 기재사항 간소화
- ▶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

○ 법무부 장관, 대검에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공보준칙 철저준수 등 특별지시

- '18. 7. 23.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공보준칙에 위반되는 심야조사, 피의사실 공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과잉 공보행위 금지 등 수사준칙 및 공보준칙 철저 준수 지시

○ 심야조사 실태조사 및 최소화 방안 시범실시

- '18. 9.~12. 인권감독관 설치 12개 지검 심야조사 실태조사, 최소화 방안 시범실시
- '19. 1.~ 심야조사 실태조사 전국 확대실시
 - 실태조사 기간(3개월) 동안 전국 12개 지검 심야조사 감소율은 10.1%, 중앙 지검을 제외한 11개 지검 감소율은 44%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17. 9. ~ 법무부 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연구 실무 T/F' 수시 개최
- '17. 11. 미국 입법례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미국 연방 퍼블릭디펜더 등 관련기관 방문, 관련 연구용역 실시
- '18. 5. 일본 국선변호인제도 및 법률구조 관련제도 운영 세부실태 파악을 위해 일본 사법지원센터 등 방문, 관련 연구용역 실시
- '18. 5. 외부인사로 구성된 제3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 계획

- 인권부 등 역할 강화 및 개정 준칙·지침 등 철저 준수, 심야조사 실태조사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토대로 심야조사 관련 지침 마련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각계 의견 수렴 및 지속 추진

3

범죄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개요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조기회복 및 건강한 생활로의 복귀 지원

■ 경과 및 성과

○ 심리적 지원

- '18. 12.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청주·울산센터)로 피해자 심리지원 구축망을 전국 13개 광역단위까지 확대
 - ※ 서울동부('10), 부산('12), 인천·광주('13), 대전·대구('14), 춘천·전주('15), 서울서부·수원('16), 의정부('17) 개소

청주 스마일센터 개소식
('18. 12. 5.)



울산 스마일센터 개소식
('18. 12. 20.)



- '19년 창원 지역에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예정

○ 경제적 지원

- '18. 3.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18. 3. 범죄피해자 주거지원대상 확대 범위

기존	+	추가 (개선안)
1. 사망, 장애 5주 이상의 상해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필요성 인정시 주거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 '18. 12.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18. 12. 21. 국회 제출)으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

○ 법률적 지원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조력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 ('17년) 19,903건 → ('18. 11) 21,089건

- 아동, 장애인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지원하여 수사기관, 법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 ('17년) 1,381건 → ('18년) 1,722건

■ 계획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주거지원 확대,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 범죄피해구조금 분할지급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스마일센터 1개소(창원) 신규 설치('19년 하반기)

- 지역별 법률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전담인력을 전국 확대 배치('19년 상반기, 각 4명)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19년 17명→21명), 상근 진술조력인('19년 12명→16명)

4

인권친화적 출입국외국인 정책,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출국금지제도 개선) 출국금지·정지 필요성과 국민권익 제한 정도를 실질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강화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시행) 불법체류자 단속뿐만 아니라, 자진 출국을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의 실효성 제고와 동시에 외국인 인권보호 달성
- (재외동포 처우개선) 중국·CIS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 간 차별을 해소하여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여 동포사회와 모국의 동반성장 모색
- (이주여성 등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정보비대칭성·언어장벽 등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여성 및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 경과 및 성과

- 출국금지제도 개선
 - '18. 6. 출국금지·정지 및 그 연장 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법무부 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범죄수사 및 재판, 조세 체납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도피, 증거인멸 우려 등 출국금지 필요성 심사 강화
-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행

|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행 내용 |

- ▶ 운영 기간 : 2018. 10. 1. ~ 2019. 3. 31.(6개월)
- ▶ 시행 내용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 면제, 단속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인 최대 10년 간 입국금지
- ▶ 시행 성과 : 2018. 10. 1. ~ 12. 31.(3개월)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21,632명 자진출국

○ 재외동포 처우개선

- '18. 3. 4세대 이후 동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체류비용 지원을 위해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취업) 허용,
- '18. 9.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영주(F-5) 자격을 신청하는 동포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1인당 GNI 수준 이상]

○ 이주여성 등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이주여성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관련 규정 법제화
- '18. 2. “계절근로자 사용 지자체 및 농·어가 필수 준수지침” 마련, 5월/1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실태 점검 실시
- '18. 3.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대책 발표, '18. 6. 성폭력 행위 등 관련 고용주에 대해 사증발급을 제한 시행 등

■ 계획

- 출국금지 심사 엄격 시행 및 인권친화적 방법에 의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재외동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정책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

5

수용자 인권보장, 과밀수용 해소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개요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6. 12. 29.)에 따른 교정시설 확충 필요성 대두
- (구인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구인용 구속영장으로 유치된 피의자 및 체포되어 입소하는 피의자를 전용 유치거실에 수용하여 죄질에 따라 유형화된 신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인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 (수용자 의료·심리치료 강화) 교정시설 내 원격의료센터 신설, 미결수용자 혈액 투석실 설치, 수용자 전문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권 보호 강화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수용자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아동친화형 가족 접견실 설치·운영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수형자의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체계화

■ 경과 및 성과

- 교정시설 이전·신축 사업 및 수용동 증축 진행

구분	사업 진행 현황
공사중	대구(교)(공정률 46%), 속초(교)(공정률 37%), 거창(구)(공정률 4%)
설계중	전주·원주·창원(교)
사업계획	부산·대전(교), 부산·대전·경기북부(구)
수용동 증축	김천소년교도소(공정률 75%)

- 구인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 '17. 6. 구인피의자 입소절차 관련 개선 계획 시달
 - '17. 7. 구인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시행
 - ※ 구인피의자 죄명(질)에 따라 간이검사, 정밀검사로 이원화, 구인피의자 대기 중 간소복 착용, 미결수용동 내 별도 구인피의자 전용 유치거실 수용
- 수용자 의료·심리치료 강화
 - '18. 1. 서울동부구치소 내 원격의료센터 설치

※ '18. 12. 피부과 등 3개 과목, 전국 37개 교정기관 수용자 진료 시행, '19년 진료과목 확대 실시 예정

- '18. 12. 서울동부구치소 내 미결수용자 전용 혈액투석실 설치
- '17. 6. ~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정공무원 생애위기 상담사 과정 운영(총 166명 자격 취득)
- '18. 4. 「수용자 심리부검을 통한 자살우려자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 '17. 10. 여주교도소 등 7개 기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18. 3. 안양교도소 등 7개 신규 설치기관 선정
- '18. 12. 기준 15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 ※ 청주여자교도소 '18. 12. 외부단체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가 확보

여주교도소 기존 가족접견실



여주교도소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18. 1. ~ 7. 여성수형자 네일아트 등 직업훈련 다양화
- '18. 3.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업무협약 체결*
 - * 수요자(기업체)가 원하는 직종의 직업훈련 실시 후 특화된 훈련생을 수요자가 채용
 - ※ 군수용 부품제작 기술전수 및 출소자 채용 협약(부산교도소-삼호정밀)
- '18. 12. 우수 기술전문가인 산업현장교수 직업훈련 초빙(20개 기관 27개 과정)
- '18. 12. 취업유망 직업훈련장 신축 (정읍교도소 리폼관리, 목포교도소 농기계정비)
- '18. 12.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신축 (화성직훈·경북직훈·상주·순천교도소)
- '18. 12. 작업장려금 연차적 인상(3년간 5%씩, '19년 예산 9억3천4백만원 확보 반영)

■ 계획

- 지속적으로 수형자 인권보호 강화 조치 시행

2019년
역점정책

1

개혁 · 민생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통과 목표 법안

○ 검찰개혁 법안

	추진 경과
공수처 설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0. 15. 공수처 법무부안 발표 ▪ '18. 11. 법무부안 기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6.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18. 7.~1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조문화하여 법무부안 성안 ▪ '18. 11. 법무·행안부장관 합의문 기초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발의

○ 경제민주화(경제정의 입법) 법안

	추진 내용 및 경과
상법 (경제민주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 구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 ▪ 경제민주화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한 개정 기본방향 설정 완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 및 사회안전·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 확대 도입 추진(증권 분야 한정→적합 등 소액·다수 피해 발생 분야 확대) ▪ 도입 범위에 대한 부처 협의 완료

○ 민생 보호 법안

	추진 내용 및 경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여 기대이익을 보호 - '18. 3.~8. 각계 및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 완료 ▪ T/F에서 마련된 대안을 토대로 법 개정 추진
주택임대차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기간 확대(계약만료 1개월 전→2개월 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동절차개시 도입 추진 ▪ '18. 5. 3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1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정책 협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기본방향 설정 완료

집합건물법 (서민·청년 주거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청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공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제도 도입 추진 ■ '18. 1. ~ 6. 지방자치단체, 실무계, 학계 등과 4차례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18. 8. 서울특별시와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18. 9. 21.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18. 10.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간담회(2회), '19. 1. 개정안 확정 및 재입법예고
법률구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구조법 개정안 마련 ■ '18. 1. ~ 10.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연구용역 시행, 실무 T/F,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 법률구조법 개정 기본방향 설정

○ 여성 등 보호 법안

	추진 내용 및 경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톱킹범죄의 정의 및 범죄유형 설정 및 엄정 처벌, 피해자 보호 등 ■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11.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법 체포' 추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교섭권제한' 추가 등 ■ 가정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예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채류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구조금 분할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제출 완료

○ 소년범죄 대응 법안

	추진 내용 및 경과
소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처분 합리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만 14세→만 13세), 특정강력범죄 2회 이상 범한 소년의 소년부 송치 제한 등 ■ 소년법 개정 기본방향 설정, 소년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 후 개정안 마련 추진
민영소년원 설치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 및 민간의 다양한 교정 교화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소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근거 마련 ■ '18. 1. 11. 민영소년원 설립 계획 발표 ■ '18. 7. 16.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법제처 심사 완료 ■ '18. 8. 21.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8. 8. 27.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회제출 ■ '18. 11.12.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후 1소위 회부, 현재 법사위 1소위 심의 중

○ 난민 관련 법안

	추진 내용 및 경과
난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8. 난민법 개정 계획 발표(장관님 국민청원 답변) ■ '18. 7. ~ '18. 11. 난민법 개정 T/F 회의 운영(총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용적 난민신청자 적극 대처 등 ■ '19년 상반기 「난민법」 개정 법안 마련 완료 및 국회 제출 예정

■ 국회 통과 추진 방법

○ 정책수요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강화, 공동 행동 적극 추진

-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청취,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 '18. 3. 소수주주를 위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수요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법안 논의 지원,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으로 입법을 통해 달라지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

○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공동 추진

-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 필요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책 협의
 - ※ 공정위 등 경제민주화 관계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논의

○ 국회 적극 설명 및 설득

- 장관을 비롯한 실·국·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직접 의원들 상대로 법률안 내용 및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개별 설명, 설득
- 필요시 T/F를 구성하여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법률안 내용 설명, 법안 심사 적극 지원

■ 향후 계획

-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며, 국회 논의 시에도 정책 수요자와 함께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설득
- 주요 국정과제 및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주요 내용 및 법안 통과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 설명, 신속한 국회 논의 지원

민생범죄 및 생활적폐, 집중 수사, 엄정 처벌 하겠습니다.

배경

- (생활적폐 집중수사)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등의 개선도 요구
- (생활적폐 엄정 처벌)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불이익을 주는 생활적폐를 근절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구현
- (서민다중피해범죄 집중 대응) 다중의 서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활·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집중수사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
-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갑질행위 처벌 강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고질적 비리,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갑질 등 생활적폐 범죄에 대하여도 엄정 대처하여 처벌 강화

추진 내용

- (생활적폐 집중수사) 공공기관 채용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비리 등 각종 비리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생활 적폐 청산의 계기 마련

- ▶ ‘18. 6.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건 처리기준 강화(필요적 구속 기준 추가)
※ 전국 시중은행 채용비리 관련 48명 기소,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 기소
- ▶ ‘18. 7. 대검, 일선 청에 지역 토착비리 엄정 대처 지시
- ▶ ‘18. 11. 법무부 장관,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역토착비리 개선 방안 발표

- (채용비리) 구조적·고질적 병폐인 공공기관 등의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전개
- (보조금 부정수급)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공적자금을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경제 분야 비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 전개
- (지역 토착비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조합장 등 부당한 압력·청탁,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 등 지역 토착세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 전개
- (탈세관행 개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 국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 집중 단속하고, 국부 유출하는 재산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사범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수사 전개

○ 서민다중피해범죄 집중 대응

- 유사수신·다단계 등 다수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가상화폐, P2P 대출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
- 대검찰청 내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TF를 설치하여 대검찰청 부서별로 나누어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업무 총괄

<p>종합대책 수립, 수사지휘 및 지원 업무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TF에서 유관기관 및 일선 청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분석·공유하여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종합대책 수립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종 수법 범행 등 주요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선제적 대응, 일선 청에 대한 신속한 수사지휘 실시 ○ 주요 사건 피해발생 초기부터 피해보전,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범죄 수익환수 등 선제적·체계적 지원 ○ 유관기관 및 일선 청 수사사례를 통하여 신종 수법의 범죄유형 취합, 전파
<p>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다중피해범죄 유형 별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의 역점 대응 사항 등을 검토하여 범정부적 대응방안 안건 상정 *불법사금융 척결TF/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P2P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p>중점청 중심의 중점 대응 체계 총괄 지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점검찰청* 중심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 유형 별 중점 대응체계 구축 ○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 전담검사 워크숍, 수사사례 세미나 등을 토대로 검사의 수사역량 강화, 각 분야별 검사 전문화 추진 ○ 각 분야별 주요 사건 발생 시 TF를 중심으로 중점청의 대응 시스템과 전문검사의 수사역량을 활용한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선제적·전문적 대응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

-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는 구조화, 관행화되는 추세로서 그 피해는 서민층에게 돌아가고 있어 반드시 근절할 필요
- '17. 12. 지정된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을 중심으로 조합장 등 금품수수행위, 인허가 관련 공무원 비리, 투기 조장 및 사기 분양행위, 조합간부의 공금횡령 등 비리 유형별로 체계적 대응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갑질행위 처벌 강화

- 최근 회사 대표의 직원에 대한 갑질 폭행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갑질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 확산

- 폭력범죄 등 빈발 범죄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행,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 범행, 대등한 관계에서의 우발적 범행 등 유형 및 죄질에 따른 처벌기준을 새로이 정립하여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비리구조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체계 유지를 통해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관련 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부패유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클린피드백 시스템(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가 공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연결)을 활용하여 제도개선 사항 115건 발굴,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83건 제도개선 추진('11~'18. 12.)

○ **부패범죄수사의 절차적 통제 강화로 공정 투명한 수사시스템 정립**

- 수사 과정에서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및 보고 처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투명한 의사결정 구현

▶ '18. 8. 대검, 부패범죄수사 절차 및 보고 등에 관한 시스템 정비
 - 부패범죄수사 절차 지침 및 보고 처리 규정 신설('19. 1. 4. 시행)
 - '18. 2.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 폐지, 전담부서 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부패범죄 수사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총장 승인 하에서만 수사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

■ 향후 계획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범죄 등 중대 부패범죄와 생활적폐에 대해 '18. 6. 상향된 구속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 예정
- 유관기관과 정보공유·협조를 통해 효율적 대응 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각 청 범죄 수익환수전담반을 중심으로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조치 지속실시
- 대검찰청 내에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TF를 설치하여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체제 정비
-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을 중심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체계적으로 대응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범죄 등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형 및 죄질에 따른 처벌기준 마련

여성 보호정책, 적극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배경

- ‘미투’ 운동과 함께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여성인권 관련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양성 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소극적 대응과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장기적 비전을 가진 체계적 대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추진 내용

- 성폭력범죄 엄정 수사 및 처벌
 - 전국 59개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운영 점검(반기별) 및 형사부 타켓형교육(연 2회), 워크숍(연 1회) 등을 통해 전담검사 전문성 강화
 -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회의 개최(반기별)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추행, 카메라촬영이용사범 등 사건처리기준 준수 실태 점검(매 분기별)
 - 여성정책연구원과 정책과제 협의 및 실무협의회(분기별), 포럼(반기별), 공동학술대회(연 1회) 개최 예정
-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 이용 성범죄 등 성차별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권력 이용 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피해자 보호 강화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적법 체류 자격을 가진 결혼 이민자를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추진

※ 결혼이민자 약 15만 명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에 포함 예상

-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청주·울산 지역에 확대 설치* 하여 여성을 포함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확대

* '10. 7. 서울 송파구에 최초 설치, '17. 12. 기준 전국 11개소(서울동부·서부, 수원,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의정부) 설치, 향후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 추진('22.)

○ 직장 내 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불평등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개선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
- 낙태죄 등 여성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협력, 합리적인 방향 마련

■ 향후 계획

- 여성·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지속
- '미투 운동'의 근본적 해결, 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무부내 유관부서(여성아동인권과, 형사기획과, 형사법제과, 국가송무과 등) 협업 강화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종합적·체계적 정부 대책 마련 및 추진
 - 특히 여성 보호를 위한 개정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유관부처 및 여성단체와 연대, 공동행동 적극 추진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요청하는 등 엄정한 양형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4

난민·외국인 정책,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 배경

-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제도 구축) 난민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방지, 난민심사 인프라 구축으로 난민심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 추진) 체류외국인이 우리의 법질서,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 강화
- (시대에 맞는 외국인 정책 수립) 국제화, 인구감소,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

■ 추진 내용

-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제도 구축
 - 남용적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 추진
 -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여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난민위원회 확대 및 상설화 추진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 추진
 - 체류외국인에 대한 기초법·질서 및 한국사회이해 등 교육 실시로 문화적 충돌 최소화
- 시대에 맞는 외국인 정책 수립
 - 우수하고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가 발전 및 경쟁력 강화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환경 조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출입국심사시스템 개발 등 스마트 이민행정 구현 추진

■ 향후 계획

-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제도 구축) 「난민법」 개정 법률안 마련 및 국회 제출, 난민심사 인력 확충, 난민위원 증원 및 난민위원회 상설화 추진('19년 상반기)
-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 추진) 난민 인정자 등 사회통합교육 의무화('19년 연중)
- (시대에 맞는 외국인 정책 수립) 범정부 중장기 외국인정책,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성공적 추진('18. ~ '22.),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기본계획 5대 정책목표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추진('19년 연중)

국민참여형 열린 법무행정, 확대하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배경

- (명예보호관찰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관리 강화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과제로 추진('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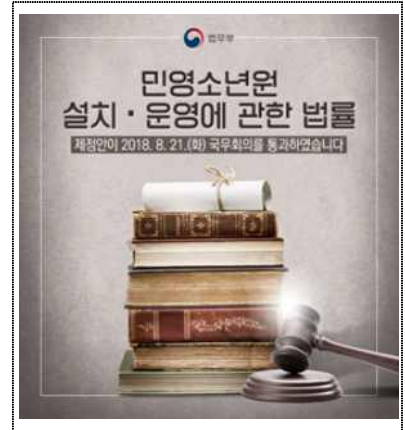
-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기존 소년원의 과밀수용을 일부 해소하고, 민간의 다양한 선도·교화 프로그램으로 교정교육의 성과 향상 도모
- (재능나눔 활성화) 다양한 재능을 가진 국민의 참여를 통한 법무정책의 충실성 제고 및 홍보
- (소년원 의료시스템 개선) 소년원 의료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의료처우를 향상시켜 소년원생의 인권보호와 건강증진 도모
- (PRO-JUSTICE) 법무부 대국민 소통기조 프로저스티스(PRO-JUSTICE) 발표
* PRO-JUSTICE(법무부 소통기조) : △P - 국민 참여(Participation), △R - 국민과 만남 (Relation), △O - 국민 의견 경청(On)

추진 경과

- 명예보호관찰 제도 내실화
 - 보호관찰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및 재범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 전문가, 심리·중독치료 전문가, 직업훈련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의 우수 전문인력 확보
※ 명예 보호관찰관 수 : '17. 12. 684명 → '18. 12. 1,246명(82% ↑)
 -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 사례집 및 핸드북 발간,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 개최
 -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와 명예 보호관찰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결연 활성화

○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 '18. 2. 5.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보호소년처우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 '18. 8. 21.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8. 8. 27. 「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회제출, 법사위 제1소위 심의 중



○ 재능나눔 활성화

- '18. 4. ~ 5. 법무부의 정책을 국민의 시각으로 홍보하는 참여형 재능나눔단 모집(214명)
- '18. 5. ~ 12. 학교폭력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 홍보에 약 400여 명 참여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디지털콘텐츠 100여개 제작 및 홍보

○ 소년원 의료시스템 개선

- '18. 2. 7. 「소년원 의료처우 개선 종합대책」 마련
- ※ 전국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실태 특별점검('18. 1. 19. ~ 1. 26.)



- '18. 2. 7.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의 재능기부 활성화
 - ※ 재능기부 의료인을 포함하여 기관별 '의료처우자문위원회' 신설('18. 4.)
- '18. 2. ~ 지역사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치료지원 네트워크 마련

- '18. 6. 1. 보호자에게 소년원생 진료정보를 알리는 시스템 구축
- '18. 6. 8. 소년원생 전원의 체중을 매일 측정하여 체중 급격 감소 시 의무과 진료를 실시하는 등 의료처우 강화



○ PRO-JUSTICE

- '17. 8. 9. '자연스럽고 친근한 법무부' 이미지 부각을 위해 '국민이 장관 집무실을 방문하여 대화한다'는 컨셉으로 영상 제작 및 게시
 - '17. 8. 10. ~ 8. 24. 국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청취 → 장관님 직접 답변
 - '17. 8. 10. ~ 8. 31.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사연 신청 접수 → '17. 10. 11.(수) 16:00 CJ 아지트 '위기 청소년 밴드' 합동 공연에 장관님 직접 방문
 - '18. 9. 3. ~ 9. 10. 네이버 법률판 ·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청취 → 네이버 법률판과 인터뷰를 통해서 답변
- ※ 댓글 통한 대국민 의견 총 2,245건 접수

■ 향후 계획

- (명예보호관찰 운영 실질화)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 실적 평가 등 관리체계 마련('19. 4.)
-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법률 제정과 동시에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19. 12.), 설계 및 건축('20. ~ '21.), 민영소년원 운영 개시('22. 7.)
- (재능나눔 활성화) 참여형 재능나눔 자원봉사자 모집, 소외계층 법교육 등에 활용('19년 연중)
- (소년원 의료시스템 개선) 의무관 직급 상향(5급→4급), 간호사 복수 배치 등 전문 인력 확보, 의료 장비 확충 및 의료 관련 법령 정비('19년 연중)
- (PRO-JUSTICE)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립니다', 신청된 사연 중 선정하여 방문 지속 실시